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96
----------	------

발의연월일 : 2024. 11. 22..

발 의 자 : 안호영 · 이학영 · 이원택
어기구 · 윤준병 · 주철현
정을호 · 박희승 · 소병훈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 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산림문화 · 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 ·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 · 휴양과 관련된 기관 ·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⑤ (생략)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⑥ ~ ⑫</u> (생략)	<u>⑦ ~ ⑬</u>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